



주간 통일정세

2013-3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주민과 스킨십 행보(8/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인과 전쟁 노병들을 챙긴 주민, 황해남도 관개수로 건설과 '전승기념관' 건설을 성의껏 지원한 주민, 식량을 '애국미'로 헌납한 주민 등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한 근로자'에게 감사를 보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리모델링 중인 평양체육관 시찰(8/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체육관의 리모델링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공사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90%까지 진행됐다는 보고에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특히 경기장 홀과 관람석을 보고 "개선보수(리모델링)에서 중요한 것은 체육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찾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함.

● 北 김정은 물놀이장·승마장 건설장 방문(8/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클럽) 공사장을 방문하고 노동당 창건 68주년인 오는 10월 10일까지 완공하라고 독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 통신은 현재 마감 공사 중인 문수물놀이장이 야외·실내 물놀이장과 배구·농구·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들로 이뤄진다고 "특색 있으면서도 규모가 대단히 큰 세계적 수준의 종합적인 물놀이장"이라고 소개함.
- 공사장을 둘러본 김 제1위원장은 "당 창건 기념일까지 문수물놀이장을 세계적인 물놀이장으로 훌륭히 완공해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 것은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라고 강조함.

● 北 김정은, 휴대전화 공장서 "사용자 편의 도모해야"(8/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휴대전화 등 각종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5월11일 공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공장 내 조립장 등 여러 곳을 돌아보았으며 특히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아리랑' 손전화기(휴대전화)의 성능과 포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점검함.
- 김 제1위원장은 "아리랑 손전화기가 보기도 좋고 가벼우며 통화와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봉사기능이 설치돼 있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면



서 "사용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면서도 보안성이 철저히 담보된 응용프로그램을 우리 식으로 개발한 데 대해 평가했다"고 통신이 전함.

■ 김정은동향

- 8/6, 김정은 黨 제1비서, '장태영'(대성지도국 부원) 등 조선혁명박물관 조성에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8.6, 중방)
- 8/7,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단계에 이른 과학자살림집(평균 85%) 건설장과 새로 개건 중인 평양체육관(73.4 준공) 시찰(8.7, 중통·중방·평방)
 - 최룡해, 황병서, 마원춘 동행
- 8/9, 김정은 黨 제1비서, 공훈국가합창단·조선인민군협주단 일꾼 등에 '감사' 전달(8.9, 중방)
- 8/9, 김정은 黨 제1비서, 미림승마구락부·문수물놀이장 건설장 시찰(8.9, 중통·중·평방)
 - 박태성, 황병서, 마원춘, 김수길 등 수행
- 8/11, 김정은 黨 제1비서, 5월11일공장(전자제품들 생산공장) 현지 지도(8.11, 중통)
 - 리재일, 김병호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마식령스키장건설정형 현지에서 요해(8.10, 중통·중방)

나. 경제

- **北 쌀값 3개월째 안정세... "2호미 배급 때문" (8/6, 데일리 NK)**
 - 6일 대북매체 데일리NK가 집계해 공개한 '북한 장마당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으로 평양과 신의주, 혜산의 쌀값은 6월 말과 비교해 1kg당 각각 400원, 150원, 100원 정도 소폭 오른 5천400원, 5천500원, 5천600원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데일리NK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 "북한의 물가가 8월 초 현재 약간의 변동폭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당국의 '2호미' 배급과 중국과 쌀 거래가 별다른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北, 청년층의 생산현장 집단진출 장려 (8/9,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우리 청년들은 조국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전투장에 달려나가 시대의 영웅으로 자랑 떨치고 있다"며 열악한 조건의 생산 현장에 자원진출한 청년들의 사례를 소개함.
 - 신문에 따르면 얼마전 함경남도 김형권신포사범대학의 졸업생 35명은



열악하기로 소문난 량강도·자강도 일대의 북부철길 개보수 공사장으로 집단진출함.

● **北 평양에 비타민C 공장 완공(8/9, 조선중앙통신)**

- 북한 평양시에 비타민C 공장이 세워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평양의 대동강 기슭에 비타민C 공장이 새로 건설돼 준공됐다"며 이날 준공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공장의 구체적인 규모나 생산 능력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준공식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 최태복 당비서, 박순철 조선대양총회사 총사장 등이 참석함.

다. 사회·문화

● **北에서도 '세계모유수유주간' 행사 개최(8/5, 조선중앙통신)**

- 세계모유수유주간(8월 첫째주)을 맞아 5일 평안남도 남포시에서 유아를 키우는 여성들과 내각 보건성과 지역 관계자들, 북한 주제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 **北 '사철국화' 유전자전이생물 1호 등록(8/6, 조선중앙통신)**

- 북한 평양화초연구소가 유전자 변형기술로 육종한 '사철국화'가 '유전자전이생물' 제1호로 등록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北 황남지역도 기습폭우...연안군 시간당 58mm(8/6,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6일 "황해남도 여러 지역에서 폭우가 내렸다"며 연안군에서 오전 9시 25분부터 1시간 동안 58mm의 강한 소나기가 퍼붓는 등 오전 7~11시에 해주시, 신흥군, 청단군, 배천군 등에서 폭우가 쏟아졌다고 보도함.

● **무더위에 北도 물놀이장·해수욕장 붐비(8/7,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7일 "삼복철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평양) 놀이물놀이장은 각계층 근로자와 청소년학생들이 매일 3천~4천 명, 최고 5천 명까지 찾아와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고 보도함.

● **北 나노기술 투자확대...전문연구원 수백명(8/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조선에서 나노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국가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나노기술 인재 양성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 것과 함께 나노기술 개발과 응용에 대한 국가적 투자도 늘리고 있다"고 전함.
- 통신은 4월 '국가나노기술중심'을 설립하는 등 나노기술 연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관련 규격과 심의체계도 세웠고 전문 연구원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면서 나노기술 관련 학위·학직(교수 및 부교수) 소유자들도 수백명에 달한다고 보도함.

● **北 "미신 배격해 제국주의 사상침투 막아야"(8/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사회와 인간을 해치는 독소'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북한 내부에 '미신'을 퍼뜨려 주민들의 사상적 혼란과 사회 불안정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며 '투철한 계급의식'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함.
- 특히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반사회주의에 목적을 둔 미신단체들이 '신앙의 자유'와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사람들을 반역의 길로 부추기고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 했으며, 결국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했다면서 "미신이야말로 제국주의 사상문화 침투의 안내자"라고 거듭 강조함.

● **北, 자본주의 생활양식 연일 비난(8/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활짝 꽃피워'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적들은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내부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한 사상문화적 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부르주아 생활양식은 극단한(극단적) 개인이기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부화방탕한 생활만을 추구하게 하며 민족성을 여지없이 말살하는 반동적인 생활양식"이라고 주장함.

● **北, 원격의료시스템 도입 주력...국제회의도 개최(8/9, 노동신문)**

-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평양에서는 원격의료 시스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HO) 동남아시아지역 기술협의회가 열린 것에 대해, 노동신문은 9일 "우리나라에서처럼 먼거리의료봉사체제(원격의료시스템)가 전국적 범위에서 짧은 기간에 수립된 실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세계적으로 'Telemedicine'(원격의료)의 도입은 정보화시대인 오늘날 해당 나라 보건사업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라며 회의 참가자들이 북한 원격의료 시스템에 대해 극찬했다고 전함.

● **北주민 무비자 입국 허용국 매년 조금씩 증가(8/10,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0일 영국의 국제교류 관련 법률회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결과를 인용, 북한 주민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2010년 36개국, 2011년 37개국, 지난해 39개국, 올해 7월 현재 41개국으로 나타났다고 전함.

● **北, 세 번째 나선국제상품전시회 19일 개최(8/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세 번째 나선 국제상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통신은 이번 전시회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 독일, 호주, 일본, 대만 등의 기업이 참가해 전기·전자제품, 차량용품, 경공업 제품, 의약품 등을 전시한다고 소개했으며 "전시회는 무역, 경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나라와 지역들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아소 부총리 발언 비난... "재침략 선동"(8/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독일 나치식 개헌을 언급한 데 대해 일본 집권세력의 "공공연한 재침(再侵) 선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함.
 - 신문은 5일 '공공연한 재침 선동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소 부총리의 발언은 "파쇼 독일을 본떠 일본도 헌법 개약과 군사대국화를 다그치고 군국주의 명령을 되살려 침략의 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며 "그저 스쳐지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함.
- **북·중, 10월 단둥 종합박람회 준비 시동(8/5, 연합뉴스)**
 - 랴오닝성 단둥(丹東)시가 5일 시 무역촉진회 홈페이지를 통해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홍길남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지난 3일 단둥에 도착해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 개최를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함.
- **WFP, 북한 수재민 3만8천명에 식량지원(8/6, 미국의소리(VOA))**
 - 세계식량계획(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북한에서 수해가 심한 가정에 강냉이 지급을 시작했다고며 배급은 30일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VOA)가 6일 보도함.
 - WFP의 식량 지원을 받는 북한 수재민은 3만8천67명이고, 이들은 1인당 매일 400g의 강냉이를 받으며 지원 지역은 평안남도 안주시, 평안북도 정주시·운산군, 황해북도 토산군, 연탄군, 함경남도 영광군 등 10개 군임.
- **北 "日 신방위대강 중간보고는 도발" 비난(8/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6일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新) 방위대강' 중간보고서를 발표함에 대해 "지역정세 격화의 근원을 외면한 도발적 주장"이라고 비난함.
 - 통신은 "최근 미국의 적대시 정책은 우리의 평화적인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제반 조건과 분위기를 파괴하는 데서 집중적으로 발



인용해 8일 보도함.

- 헨즈 오프 카인은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에서 최소 20건의 사형이 집행돼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았고 북한의 공개처형 건수는 2010년 60건, 2011년 30건으로 매년 줄고 있지만, 당국이 공식 사형집행 건수를 밝히지 않아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설명함.

● **FAO "北, 올해 식량 부족분의 57%만 확보"(8/9, 미국의소리(VOA))**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이 올해 부족한 식량의 57%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함.
- FAO는 지난 8일 분기별로 발표하는 '곡물 작황과 식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수정, 북한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 초까지 외부에서 확보한 곡물은 29만 600t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올해 10월까지 북한에서 부족한 곡물 50만 7천t의 57%에 불과한 수치로 북한은 여전히 식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FAO는 설명함.

● **北 "개발도상국 간 협력 강화해야"(8/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단결과 협조는 자주화된 새 사회건설의 기본 추동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현시기 발전도상 나라들 사이의 단결과 협력은 시대의 기본 흐름으로, 자주화된 새 세계를 창조하는 기본 추동력"이라고 역설함.
- 신문은 "발전도상 나라들이 국력을 강화하는 길은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 길뿐"이라며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약탈책동을 짓부수고 자주적 발전을 이룩하자면 개별적인 나라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함.
- 또한 "협조와 교류를 다각화, 다양화해야 나라들 사이의 관계를 폭넓고 심도있게 발전시킬 수 있고 전반적 국제관계 발전을 추동할 수 있다"라며 "국제무대에서 발전도상 나라들의 이익을 고수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 **북·중, 단둥 종합박람회 10월 중순 개최(8/9, 단둥일보)**

- 북한과 중국이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양국 종합박람회인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를 오는 10월10~14일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단둥일보가 9일 전함.
- 일보에 따르면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홍길남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은 지난 3일 단둥에 도착해 스광(石光) 단둥시장, 판샹(潘爽) 부시장 등을 만나고 실무 회의와 현장 답사를 거쳐 이같이 합의함.

● **북한 억류 케네스 배, 병원 입원(8/10, 연합뉴스)**

-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가 최근 특별교화소(교도소)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10일(현지시간) 배씨의 가족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함.



- 파나마 "北선박서 대전차용 로켓추진수류탄 발견"(8/11, 연합뉴스)
 - 파나마 당국은 억류 중인 북한 선박 청천강호에서 추가로 폭발물을 더 발견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함.
 - 파나마의 하비에르 카르바요 마약담당 검사는 11일(현지시간) 조사관들이 선박에 실린 5개의 나무 상자 중 한 개에서 대전차용 로켓추진 수류탄을 발견했다고 말했으며 나머지 네 개 상자는 안전상의 이유로 열어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北노동신문 "일본은 헌법 개악 말고 과거청산해야"(8/11,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헌법 개악이 아니라 과거청산의 길로 나가야 한다'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글에서 평화헌법이 '개악될 경우 "일본이 대동아공영권 실현을 위한 침략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며 "일본은 헌법 개악, 군국화 높음을 견어치우고 과거 죄악에 대해 반성,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요구함.
 - 신문은 지난 5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관동군 세군부대인 '731부대'를 연상시키는 편명 '731'의 자위대 훈련기에 탑승한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됐던 사실 등을 거론하며 "취임 초기에는 본색을 숨기고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척했지만 그의 우익적인 태도는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함.

■ 기타 (대외 일반)

- [중통 논평] 일본 정부의 '新 방위대강' 중간보고서 발표(7.26, 北 미사일 공격에 대응 능력 강화 등)에 대해 '지역정세 격화의 근원을 외면한 도발적 주장, 군사대국화 술책'이라며 한반도 정세완화 길은 '미국의 反北정책 철회와 駐日·韓 미군 철수'라고 주장(8.6, 중통)
- 미국의 '北 미사일위협 대처' 일본·터키 등 세계 도처에 레이더 및 미사일방위 요소들 추가배치 관련 "군사적 우위에 기초한 세계적 패 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8.6, 중통·민주조선)

나. 6자회담(북핵)

- 北 우라늄공장 두배로 확장...핵무기 두개 제조가능(8/8, 연합뉴스)
 - 미국 핵 안보 관련 연구소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7일(현지시간) 내놓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3월 우라늄 농축공장과 5메가와트(MW) 흑연감속로를 포함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을 재정비·재가동한다고 밝힌 이후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시설이 있는 건물의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함.
 - ISIS는 "북한은 지난 2010년 2천개의 원심분리기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8천kg-SWU(농축 서비스 단위)의 농축우라늄을 생산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론상으로 볼 때 북한은 이 같은 확장된 시설을 이용해



현재 4천개의 원심분리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만6천 kg-SWU(농축 서비스 단위)의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함.

- **中, 핵실험 감시정보 국제사회와 공유…"北에 경고"**(8/11, 연합뉴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 북한 핵 문제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중국이 자체 네트워크로 확보한 핵실험 감시 정보를 국제기구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와 공유하기로 했다고 11일 연합뉴스가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인용해 보도함.
 - SCMP는 장위린 중국 국방부 부부장(차관)은 최근 CTBTO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라지나 저보 CTBTO 사무총장과 만나 독자 확보한 핵실험 감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함.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개성공단 7차회담서 좋은 결실 기대"**(8/8, 연합뉴스)
 - 북한이 8일 관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해 개성공단 7차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함.
 -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 보낸 전통문에는 우리측 전통문을 접수했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들의) 아량과 대범한 제안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삼가해 달라"는 표현이 포함됨.
- **北, 개성 7차회담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 강조**(8/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6·15 공동선언은 민족문제 해결의 근본열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남관계 개선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근본 전제"라며 "조선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막고 자주통일을 실현해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불신과 대결의 현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 협력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남조선 당국이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응해 나선다면 북남관계는 신뢰와 화해,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 접촉 제안 등 악화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주동적이며 성의있는 조치들을 취하였다"며 제안 내용도 소개함.



나. 경제·사회·문화

● 북한TV, 개성공단 영상물 방영...정상화 의지 표시(8/5,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가 5일 오후 6시40분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선전하는 기록영화 시리즈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의 제10부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시여'를 방영했다고 연합뉴스가 5일 전함.
- 영화는 김 위원장의 최대 업적으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과물인 6·15공동선언을 꼽으면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탄생 과정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비중있게 다루면서 개성공단이 들어서고 금강산 관광 길이 열린 것은 모두 김정일 위원장의 통일을 위한 '대범한 조치'라고 선전함.

● 北 "南 대화의지 없어 회담 결렬위기"(8/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북과 남이 나아갈 길은 우리 민족끼리의 길'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개성공단 회담의 결렬 위기인 것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해나가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해 빚어진 필연적 결과"라며 남측 책임론을 지적함.
- 신문은 "남조선 집권세력은 말로는 북남 사이의 '신뢰'를 운운하고 있지만 동족을 신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외세와의 공조에 매달리고 있다"며 "동족을 불신하면서 외세와 야합해 우리를 어찌 보려 하는 것은 북남 관계 개선의 엄중한 장애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함.

● 北, 14일 7차회담 제안...재발방지 입장변화 없어(8/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7일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실무회담을 오는 14일 개최하자면서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의 해제 및 기업의 출입 전면허용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를 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대변인은 이어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동을 보장하도록 한다"면서 "우리의 이상과 같은 대범하고도 아량 있는 입장 표명에 호응한다면 남측 당국이 거듭 요청하는 7차 개성공업지구 실무회담을 8월 14일 공업지구에서 전제조건 없이 개최할 것을 제기한다"고 밝힘.

● 北 "우리 아량·대범한 제안에 찬물끼얹는 말 삼가야"(종합)(8/9, 연합뉴스)

- 북한이 우리측의 '14일 개성공단 회담 개최 수용' 통보에 회신문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아량과 대범한 제안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삼가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9일 뒤늦게 밝혀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측의 '7차회담 수용' 전통문을 접수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통문을 전날 오후 판문점 연락채널



을 통해 우리측에 보냄.

● 北노동신문, '남북관계 개선' 연일 강조(8/10,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북남대결상태를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는 개인필명의 글에서 한반도의 긴장상태 완화와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는 것은 조성된 정세로부터 제기되는 현실적 문제"라며 "북남관계를 시대의 흐름과 온 겨레의 지향에 맞게 개선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함.

■ 기타 (대남)

-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결렬위기'를 '남 당국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빚어진 결과'라고 왜곡 및 '외세배격, 우리민족끼리 투쟁' 강조(8.6, 중방·중통·노동신문)
- [「조평통」대변인 특별담화(8.7)] 개성공단 정상화 관련 7차 실무회담(8.14, 개성공업지구) 개최 제안(8.7, 중통·중방·평방)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민주주의와 새 정치를 지향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촛불집회 등 반정부 투쟁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대중적 투쟁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8.7, 평방)
- 우리 정부의 '정전협정 60주년' 기념행사 관련 '6·25전쟁에서 미국과 저들이 승리한 듯 여론을 오도하고 수치스러운 참패를 가리기 위한 파렴치한 기만극'이라고 비난(8.8, 평방)
- 국정원의 대선개입 및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을 거론 '국정원은 평화통일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모략과 음모의 본거지, 악의 소굴'이라고 비난하며 '국정원 해체' 지속 주장(8.8, 평방)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日, 中에 "비핵화 진전없는 6자회담 안된다" 강조한듯>(8/5,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일본 수석대표인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5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회담재개 문제를 논의했음.
 -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이날 "오늘 중국과 일본의 북핵 6자회담 대표가 회담을 했다는 소식을 외교채널을 통해 전해들었다"고 말했음.
 - 이날 회담과 관련, 교도통신은 이하라 국장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이고 의미있는 조치(steps)가 나오기 전까지는 6자회담을 재개해서는 안된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을 일괄 논의하지는 입장을 견지하는 중국 측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음.
 -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번 회담소식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음. 이하라 대표는 지난달 23~26일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과 만나 북핵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음.
 - 한편, 이하라 국장의 이번 방중은 중국측과 사전 교감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 <北 우리늄공장 두 배로 확장...핵무기 두개 제조가능>(8/8, 연합뉴스)
 - 북한의 우리늄 농축시설이 불과 6개월 만에 두 배 이상 확장됐다는 분석이 제기됐음.
 - 이에 따라 무기급 농축 우리늄을 농축하는 원심분리기 수도 두 배 이상 늘어나 연간 핵무기(우리늄탄)를 두개 이상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음.
 - 이 같은 사실은 미국 핵 안보 관련 연구소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7일(현지시간)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글로브사와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을 관독한 결과 드러났음.
 - ISIS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3월 우리늄 농축공장과 5메가와트(Mw) 흑연감속로를 포함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을 재정비·재가동한다고 밝힌 이후 우리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시설이 있는 건물의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음.
 - ISIS는 이어 "지붕 등 외관상으로 드러난 구조로 볼 때 원심분리기 시설의 길이와 넓이는 확대됐으며(120x15m²), 이는 기존 시설이 두 배 늘



- 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 "확장된 시설의 내부 바닥은 세 개의 실(室)과 두개의 작은 방(18x15m², 9x15m²), 그리고 대규모 홀(93x15m²)로 구성돼있다"며 "대규모 홀에 원심분리기 시설이 설치돼있다"고 추정했음.
 - ISIS는 "북한은 지난 2010년 2천개의 원심분리기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8천kg-SWU(농축 서비스 단위)의 농축우라늄을 생산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론상으로 볼 때 북한은 이 같은 확장된 시설을 이용해 현재 4천개의 원심분리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만6천kg-SWU(농축 서비스 단위)의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음.
 - ISIS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하는지, 또 영변이 유일한 원심분리기 시설인지 불투명하다"며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부터 무기급 우라늄을 충분한 규모로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음.
 - 현재 북한이 영변 단지에서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무기급 우라늄은 8~34kg에 이룸. 따라서 원심분리기 숫자가 두 배로 늘어났을 경우 생산량은 16~68kg으로 늘어났을 것이라는 게 ISIS의 추정임.
 - 한편, ISIS는 "하나의 핵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무기급 농축우라늄은 약 20kg"라며 "실험용 경수로에 쓰이는 우라늄을 제외한다면 이 같은 생산능력 증가는 무기급 핵무기를 두개까지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음.
 - ISIS는 "현재 영변 단지 내에 두개의 새로운 건물이 건설 중이며 또 다른 건물은 지붕이 얹혀지고 있는 과정"이라며 "새로운 건물들은 실험용 경수로를 위한 연료생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내주 북핵문제 협의>(8/9, 연합뉴스)
- 한국과 러시아가 다음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협의함. 이를 위해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3~15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임.
 - 지난 5월 임명된 조 본부장이 러시아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르 모르쿨로프 외교부 차관을 만나는 것은 처음임.
 -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는 상견례를 겸한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됨.
 - 조 본부장은 특히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대화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됨.
 - 한·러 양국의 6자 회담 차석대표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음.
 - 조 본부장은 조만간 일본측 신임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의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미·북 관계

- <CIA 차장 "미숙한 김정은과 핵개발, 우려스러운 일">(8/8, 연합뉴스)
 - 마이클 모렐 미국 중앙정보국(CIA) 차장은 경험이 부족하고 불안한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북한이 개발 중인 핵·미사일 문제가 결합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 모렐 차장은 8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은 미국을 겨냥하는 핵미사일 능력의 측면에서 결국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CIA 최고위 간부가 한동안 전쟁 위협을 가했던 '김정은의 북한'에 관해 직접적으로 견해를 밝히기는 이례적인 일임.
 - 모렐 차장은 북한을 2년 넘게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이란, 전 세계 알카에다 조직망 등에 이어 위협적 존재로 언급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그는 신형·화학무기를 보유한 시리아 정권이 내전으로 붕괴된 뒤 파키스탄을 대체할 새로운 '알카에다의 은신처'로 부상한다면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며 시리아가 미국 안보에 해가 될 가장 큰 위협으로 거론했음.
 - 한편, 모렐 차장은 이란과 관련해서는 핵개발을 통해 중동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하려는 야욕이 미국을 우려스럽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 <北 '핵시설 증축' 실체는...美 '견인효과' 노린 듯>(8/9, 연합뉴스)
 - 미국의 핵안보 관련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홈페이지에 등장한 북한의 영변 핵시설내 우라늄 농축 건물 모습은 지난해 5월 헌법에까지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북한의 핵개발 능력이 자칫 '임계수준'을 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함.
 -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의식하는 상대는 역시 미국이라고 입을 모음.
 - 북한은 올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미국까지 겨냥한 '핵미사일 위협'을 가해왔음.
 - 한때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공포감이 돌면서 어떤 형태로든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요즘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 미국이 중시하는 비핵화 조치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유예와 함께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함한 핵활동 유예가 포함됨.
 - 지난 6월 제임스 줌왈트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대행은 하원 외교위 산하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다시 허용하는 등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해야 6자 회담 등의 대화나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IAEA의 사찰을 통해 미국은 영변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 있을 것으로 의심하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파악하고 싶어함.
 - 이렇게 보면 북한의 영변 우라늄 농축건물 증축은 다분히 미국을 자신



들이 원하는 협상장으로 전인하기 위한 위협 카드로 분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짐.

- 이제 시선은 미국쪽으로 쏠리고 있음. 점점 위협 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여전히 북한에게 '먼저 비핵화 조치를 하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시간 보내기에 주력할지, 아니면 위협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접촉에 나설 결단을 내릴 것인지 주목됨.

● <“美 조엘 위트-北 안명훈 제네바서 주초에 회동”>(8/9, 연합뉴스)

- 북한과 미국이 이번주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반관반민(半官半民) 형태의 '1.5 트랙' 방식으로 비공식 접촉을 가진 사실이 확인됐음.
-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에서 북한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초빙교수가 나섰고, 북한 측에서는 안명훈 외무성 미국 부국장 등이 참석했음.
- 안 부국장은 지난해 미국과의 식량지원 회담에서 북한 측 대표로 나선 바 있음.
-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8일(현지시간) "위트 전 담당관과 안 부국장이 이끄는 북한측 실무자들이 이번주 초에 제네바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미국 정부가 공식 관여한 회동이 아니어서 의미있는 결과가 있을 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음.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미간 비공식 접촉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미국 측 인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음.
- 이번 회동은 지난해 열렸던 북미간 비공식 접촉과 마찬가지로 비정부기구인 핵위협이니셔티브(NTI)가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트 전 담당관과 최 부국장은 지난해 7월31일부터 2박3일간 싱가포르에서 회동한 바 있음.
- 이번 회동은 미국 정부가 직접 관여하거나 공식 메시지를 전달하는 회동은 아니어서 북미관계에 돌파구를 여는 역할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높음.
- 다만 북한 측이 위트 전 담당관을 통해 비공식적인 대화재개 메시지를 던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다. 중·북 관계

● <중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中대북정책 큰 변화 없다">(8/6, 연합뉴스)

- 환쥘쥘 중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6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 환 부소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중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는가'라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대해 "최근(중국의 대북정책을 놓고) 오해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음.



- 그가 거론한 '대북정책에 대한 오해'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비핵화 정책을 포기했다는 견해나 중국이 평화안정보다 비핵화를 우선시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시켰다는 분석 등을 의미함.
- 란 부소장은 "내 생각에 우리의 (북중 관계) 원칙은 매우 분명하다. 우선 우리는 비핵화를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비핵화와 평화안정(원칙)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강조했다.
- 다만,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한 것은 북한이 국제협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의 대북 태도에 결과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음.
- 란 부소장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국제사회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에 의해 대북제재 결의가 이뤄졌다"며 "중국이 안보리의 세 차례에 걸친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한 이유"라고 말했음.
- 아울러 "동시에 우리는 지난 2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동북아시아에 큰 긴장이 형성되고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 란 부소장은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번에 북한 특사(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음.

● <핵개발 北, '경제·핵' 병진노선 언급은 자제>(8/8,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한꺼번에 달성하겠다는 이른바 '병진노선'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주목됨.
- 내부적으로는 우리농 농축시설을 확장하는 등 핵능력 증강에 힘쓰면서도 대외적으로는 핵 관련 발언을 자제하며 조심스러운 듯한 모양새임.
- 북한이 지난 3월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을 채택한 이래 각종 매체와 행사들에서 레퍼토리처럼 사용했던 것과 대조적임.
- 지난 5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대화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병진노선 언급은 계속 강조했었음.
- 북한의 이런 변화 양상은 김정은 체제가 핵보유를 헌법에 못박고 병진노선을 새로운 국가노선으로 야심차게 내세웠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끄.
- 병진노선에 대한 침묵은 북한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의도된 제스처일 가능성에 전문가들은 무게를 두고 있음.
- 대화 국면을 원하는 북한이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 핵증강을 강조하는 병진노선표현을 자제할 수 있다는 것임.
- 무엇보다 최대 우방인 중국을 의식했을 개연성이 큼. 북중관계의 복원을 통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서 탈출하려는 의도로 보임.
- 중국은 최 총정치국장의 방중 후에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며 북한을 압박해왔음.
- 최 총정치국장,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김성남 당 국제부 부부장 등이 잇달아 방중해 6자회담을 포함한 각종 대화를 원한다고 밝히고 북한 매



- 체들도 친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비핵화를 주문하고 있음.
- 리위안차오 중국 국가부주석도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김 제1위원장을 만나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은 체제가 정치·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 북중관계를 복원하려면 비핵화 문제에서 성의를 보일 수밖에 없는 셈임.
- 남한과 미국도 북핵문제에서 북한의 근본적 태도변화가 없이는 대화에 응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이 병진노선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전반적인 대외개방 기초에서 중국 등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 그러나 북한이 병진노선을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 한미군사훈련 등으로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고 북미관계가 계속 풀리지 않는 등 한반도의 정세에 따라 언제든지 이 표현을 다시 부각할 가능성은 충분함.

라. 일·북 관계

● <北, 아소 부총리 발언 비난... "재침략 선동">(8/5, 연합뉴스)

- 북한은 5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독일 나치식 개헌을 언급한 데 대해 일본 집권세력의 "공공연한 재침(再侵) 선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공공연한 재침 선동은 무엇을 보여주는 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소 부총리의 발언은 "파쇼 독일을 본떠 일본도 헌법 개악과 군사대국화를 다그치고 군국주의 명령을 되살려 침략의 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며 "그저 스쳐지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 또 아소 부총리의 발언은 "나치 독일이 파쇼 독재를 실시하면서 권력의 힘으로 헌법을 개악한 것처럼 저들도 그런 식으로 헌법 제96조와 제9조를 개악하고 마음대로 해외침략의 길에 뛰어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 신문은 이어 "아소로 말하면 평범한 개별적 인물이기 전에 일본의 정책 제안과 그 집행에서 주도적인 인물"이라며 "명백히 그의 발언은 아소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현 집권세력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北 "日 신방위대강 중간보고는 도발" 비난>(8/6, 연합뉴스)

- 북한은 6일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新) 방위대강'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지역 정세 격화의 근원을 외면한 도발적 주장"이라고 비난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조선 반도와 지역정세 악화의 근본 요인은 미국의 끈질긴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과 지역에서의 미군의 군사



- 력 강화에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중앙통신은 "최근 미국의 적대시 정책은 우리의 평화적인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제반 조건과 분위기를 파괴하는 데서 집중적으로 발로되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대조선 정책에 적극 편승하는 것으로서 저들의 군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해외침략 야망을 실현해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조선 반도와 지역에서의 긴장 격화를 끝장내는 길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와 일본 및 남조선 주둔 미군의 철거에 있다"고 덧붙였다.
 - 한편, 일본 방위성이 지난달 26일 공개한 신방위대강 중간보고서는 일본의 무기수출금지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는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하고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탄도미사일 대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마. 러·북 관계

● <러, 북 노동자 수 감축 가능성>(8/6, 자유아시아방송)

- 러시아 이르쿠츠크주가 내년도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올 해(2만5천900명)보다 14.3% 줄어든 2만2천200명으로 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음.
- 6일 지역 통신사인 텔리인폼에 따르면 이르쿠츠크주는 현지 820개 기업체가 올 초 요청한 2014년 외국인 노동자 쿼터 10만8천800명 중 20%만 승인키로 했음. 이는 2008년(5만300명) 이후 계속 감소한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쿼터 감소분은 거의 절반(48.5%)에 이룸.
- 이 매체는 지난 2월 기준으로 이르쿠츠크에서 정식 노동허가를 받아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수는 1천600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6.2%에 이른다고 밝혔음.
- 이르쿠츠크주는 특히 시베리아 지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파견돼 일하고 있는 벌목 분야 쿼터를 절반으로 줄일 예정이어서 주목됨.
- 러시아 전체 쿼터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외화벌이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노동자 해외 파견 확대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실제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이 파견된 지역 중 하나로 알려진 프리모리예주(연해주)도 올 해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지난해보다 19% 줄인 바 있음.
- 이르쿠츠크 당국은 앞으로 러시아가 해외 노동자를 받아들일 때 전문 기술을 가진 숙련공 취업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는 2만 명 정도로 이들은 주로 벌목, 건설, 농업 등에 종사하고 있음.
- 한편, 북한은 지난 6월 극동 아무르주와 경제협력 확대 협정을 체결하는 등 러시아와 경협에 공을 들이고 있음.



은' 군대로 갈 것이냐의 선택을 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한 바 있음.

- 특히 새로운 전쟁계획이 검토될 경우 사이버 무기를 통해 적군의 유무형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사이버 전쟁'의 개념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 주목할 점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미군의 작전계획에 어떤 영향이 끼쳐질지임. 워싱턴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이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지만 기동력과 효율성을 감안해 부분적인 수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옴.

● <전작권 이양, 한미 양국의 '책임 시험대'>(8/6, 월스트리트저널)

-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불안해진 한국 정부는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음. 한국 측의 이 같은 요청은 미국이 이른바 '깡패국가들을 견제하는' 세계 경찰국가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줌.
- 양측은 이미 2010년에도 전작권 환수시기를 한차례 늦춘 바 있음. 북한이 한국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을 폭침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
- 이후 북한은 연평도를 포격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한국과 미국 본토를 향해 전쟁 도발을 계속해왔음. 이러한 위협 속에서 한국이 전작권 전환으로 지휘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
- 또한 한국은 미국이 전작권에서 손을 뗄 경우 미군의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안보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함. 이는 16명의 전직 국방장관을 비롯한 많은 한국인들이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 방침을 정했을 때부터 이를 반대해 온 이유 중 하나임.
- 이러한 우려는 미국의 현 외교정책이 세계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더욱 극심해졌음. 미국은 아시아를 전략적 '중심축'으로 삼겠다고 공언하면서도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해군과 공군을 축소하고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는 전략을 버렸음.
- 미국이 전작권 이양을 마칠 경우 한미 양국군은 전시에 각각 별도의 지휘체계 하에 놓이게 돼 자칫 잘못된 의사소통과 명령의 지연 등 취약점을 노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은 이를 악용하게 될 것임.
- 전시에는 중대한 결정 대부분이 정치권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은 작전통제권의 통일이 근본적인 군 지침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이제 공은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임.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 각료들이 연례국방회의를 갖는 올 10월까지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지만 2015년 12월이라는 당초 이양 시기가 아직 많이 남은 관계로 미국이 결정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하지만 결국 미국은 우방인 한국의 요청에 답을 해야만 함. 이를 무시할 경우 한반도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의 우방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임.



- <한미, 19~30일 UFG연습 실시...남북회담 영향 촉각>(8/10, 연합뉴스)
 -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실시한다고 10일 발표했다.
 - 연례적으로 시행되는 한미 연합연습 중 하나인 UFG 연습은 한반도 안전보장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방어적 목적의 지휘소 연습임.
 - 미군 측에서는 외국에서 활동 중인 병력 3천여 명을 포함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3만여 명이 참가하고, 한국군은 군단, 합대사, 비행단급 이상 5만여 명이 참여함.
 - 정전협정 이행 및 준수 여부를 확인·감독하는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스위스와 스웨덴 요원들도 이 훈련을 참관함.
 - 특히, 올해는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7개국의 유엔군사령부 파견국이 참관할 계획이라고 연합사는 설명했다.
 - 연합사는 이날 오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훈련 일정과 방어적 목적의 훈련 성격 등을 북측에 통보했음.
 - 유엔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군사분계선(MDL) 근처에서 핸드마이크로 북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유엔사와의 직통전화선을 받지 않고 있음.
 - 제임스 서먼 연합사령관은 "UFG 연습은 한미 양국 군의 준비태세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동맹간의 연습"이라며 "이 연습은 실전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필수과업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북한은 매년 관영 매체 등을 통해 UFG 연습 실시를 비난해왔음. 정부와 군 당국은 UFG 연습이 오는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리게 될 제7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을 세우고 있음.

나. 한·중 관계

- <중국 '재탈북자 김광호씨 가족' 처리 진퇴양난>(8/7, 연합뉴스)
 - 중국 당국이 구금하고 있는 재탈북자 김광호씨 가족의 처리 문제를 놓고 외교적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홍콩 매체가 지적했다.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 인터넷판에서 중국 당국은 김씨와 부인 김옥실씨, 그리고 1살 된 딸을 북한 사람으로 봐야 하는지, 한국인으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 김 씨는 2009년부터 3년간 한국에 거주했다가 지난해 말 북한으로 되돌아갔으나 다시 탈북해 중국에 머물다 연변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은 지난달 18일 김씨 일행을 체포해 조사 중임을 공식 확인했음.
 - 우리 정부는 김씨 일행 5명 중 김씨 부부와 자녀 등 3명은 한국 국적을 가진 만큼 어떤 경우에도 북송은 지지한다는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영사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리 정부는 또 나머지 김씨 처제와 처남은 한국 국적이 없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인도적인 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음.

- SCMP는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주 "한국 정부는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다. 한·일 관계

● <나흘 앞둔 8·15...한일정상 입과 발에 '주목'(8/11, 연합뉴스)

- 한일관계 달력에서 가장 굵은 동그라미가 쳐진 8·15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음.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이날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에 담긴 메시지,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참배 여부 등이 한일관계를 추가 악화로 몰고 갈지, 새로운 모색의 기회를 제공할지 주목됨.
- 그러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닷새후 맞이한 작년 8·15때에 비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을 정도로 현재 한일관계는 최악임.
- 한국 정부는 4월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과 아소 다로 부총리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에서 나타난 일본 지도부의 역사인식 문제를 관계개선의 최대 암초로 꼽고 있음.
- 반면, 일본 매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가 4월 침략 발언 이후 민감한 발언을 자제하는 등 역사인식에 관한 한 할 만큼 했다는 입장임.
-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 각료 및 정치인들의 8·15 야스쿠니 참배를 한일관계의 중대 변수로 꼽고 있음.
- 한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총리, 부총리, 외무상, 국방장관 등 4명에 대해서는 참배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편, 현재 휴가중인 아베 총리는 당일 도쿄에서 열리는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하는 일정이 알려졌지만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는 '갈지 안갈지 말하지 않겠다'는 기조
- 다만 일본 주류 매체들은 잇달아 아베 총리가 8·15 야스쿠니 참배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하고 있음. 또 지난 4월 참배로 파장을 야기한 아소 다로 부총리도 최근 참배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가운데,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담당상 등 아베 내각 각료 최소 3명이 참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참배하는 각료와 정치인의 수, 직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나 총리와 부총리를 포함한 정권의 핵심 4인이 참배하지 않는다면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임.
- 일본은 박 대통령의 경축사에 주목하고 있음. 역사인식 문제를 어느 선에서 거론할지,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자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언급할지 등이 관심사임.
- 꼬일대로 꼬인 현 상황에서 양국 정상은 만나 풀기 전에는 한일관계 개



- 선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양국 소식통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다음 달부터 잇따라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이 약식으로나마 첫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
- 일정표 상으로 9월 5~6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10월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계기에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날 기회가 있음.
 - 아베 총리는 지난달 21일 참의원 선거 직후 적극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을 피력해왔음.
 - 반면, 박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언론사 간부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정상회담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미래지향적 관계'를 논의하기 위한 일본 쪽의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음. 이는 북한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해서도 세워둔 원칙을 쉽게 물리지 않겠다는 기조임.

라. 미·중 관계

- <美하원 타이완 무기판매 법안 통과 시도...中 "내정간섭">(8/5, 인민일보)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외위회)는 1일 '2013 타이완정책법안'을 통과시키며, 본 법안에서 미국과 타이완 고위층 상호방문 대우 제고와 다양한 방어 수요를 제공하기로 규정하였는데, 이 같은 행위는 외위회 측이 중국 내정을 무자비하게 간섭하는 것임.
 - 본 법안은 공화당 의원이 제출하고 의원 23명이 연합 서명한 이른바 '2013 타이완정책법안' 규정으로 미국 측은 미국과 타이완의 '내각관리 상호방문'을 고무해 양측 관리가 모든 미국정부 부처 사무실에서 회동하는 것을 허가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페리급 미사일 호위함인 '테일러호'(USS Taylor),' '칼호(USS Carr)'와 '엘로드호(USS Elrod)'의 타이완 이양에 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해 타이완 방어력이 증가되도록 했음.
 - 또한 미국 대통령은 타이완이 제기한 F-16CD 전투기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규정 시일 안에 국회에서 보고하며 타이완 방어 안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음.
 - 외위회의 이번 법안이 법률화되기 위해서는 국회 하원 전체회의와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에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고, 현재까지 미국국회 상원에서는 유사한 법안이 제기되지 않았음.
 - 공화당 의원은 2011년 지난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하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얻지 못했음. 따라서 상기 법안의 하원 전체회의 심의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수 있음.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전 중국은 미국 측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미국 측이 하나의 중국정책과 중미 3개 연합공보 원칙을 준수해 '미국과 타이완' 간 정부 차원 왕래, 무기 판매를 중단하길 여러 차례 촉구하며 양국관계와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깨뜨리지 않길 거듭 당부했음.

마. 미·일 관계

● <"미국, 日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추진에 우려 표명">(8/7, 연합뉴스)

- 일본 아베 정권이 새 방위대강 연내 책정에 맞춰 검토중인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미국 정부 당국자가 최근 개최된 미·일 정부 간 협의에서 한국,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음.
-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측은 지난 7월 25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외교국방 차관보급 협의에서 일본 측이 새 방위대강의 중간보고 내용을 설명하면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 "근린 국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생각하길 바란다"면서 한국, 중국을 배려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음.
- 미국측은 특히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의 보유를 검토중이냐", "상정되는 공격 대상국은 어디냐"고 질문한 후 근린 국가들에 대한 정중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 일본측은 이에 대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한 일본 정부 내 논의가 아직 마무리된 것은 아니며 각 방면에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음.
- 미국측의 우려 표명은 역사인식 등을 둘러싼 한·일, 중·일간 긴장이 동아시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검토가 한국, 중국의 반발을 초래해 관계가 더 악화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일본 방위성은 지난 26일 발표한 새 방위대강 중간보고에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관련,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다시 검토, 종합적인 대응능력을 확충한다"고 명기했음.

바. 미·러 관계

● <스노든 갈등...미-러 멀어지고, 中-러는 밀착>(8/9,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한 러시아의 임시망명 허용에 항의해 다음 달 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갖기로 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함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음.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더욱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 '오바마의 푸틴 모욕, 러시아-중국 관계에 새로운 초점을 맞추게 하더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러시아 정상회담 취소가 양국 관계 및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음.
- 워싱턴에 위치한 싱크탱크(두뇌집단)인 '국가이익을 위한 센터'의 디미트리 시메스 소장은 "요즈음 러시아와 중국 지도자들은 매우 빈번하게 전



- 화통회를 한다"면서 "미국 지도자들과의 통화 빈도보다 높다"고 말했다.
- 중국과 러시아는 1969년 전쟁을 벌일 정도로 갈등과 경쟁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서방 국가들의 개입에 반대하는 이데올로기적 친밀성을 갖고 있음.
 - 특히,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은 중국으로 하여금 러시아의 유대를 강화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 러시아 또한 자국산 천연가스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수요가 줄어들자 아시아 국가들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임.
 - 푸틴 대통령은 대통령에 복귀한 뒤 첫 방문지로 중국을 택했으며, 시주석도 주석 취임 후 첫 방문국이 러시아였을 만큼 두 나라 정상은 유대 관계를 과시하고 있음.
 - 물론, 미국 관리들은 스노든 문제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하게 만든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핵무기 감축 문제, 시리아 내전 해법 등 의제에 관해 조율이 여의치 않았다는 얘기임.
- <미·러 '2+2회의' "북핵 등 공조 현안도 많아">(8/10, 연합뉴스)
- 미국과 러시아 외무·국방장관들은 9일(현지시간) 에드워드 스노든 등을 둘러싸고 양국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북한 핵 문제 등 공조할 현안도 많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음.
 -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에서 '2+2 회의'를 개최했음.
 - 이번 회의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 감시 프로그램 등을 폭로한 스노든에 대해 러시아가 임시 망명을 허용하고 백악관이 이에 반발해 내달 초로 예정됐던 벅락 오바마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등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하는 외중에 열린 것임.
 - 미국과 러시아는 회의에서 이달 안에 시리아 평화 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 협의를 열기로 합의하는 등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음.
 - 케리 장관은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중요하다. 양국은 서로 공유하는 이해도 있고 때로는 서로 충돌하거나 갈등하는 이해도 있다"면서 "그런 면에서 양국은 일치하거나 그렇지 않은 분야에 매우 솔직하다"고 말했다.
 - 이어 "비단 스노든 사례만 아니라 양국이 지금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며 미사일 방어나 아프가니스탄, 이란, 북한, 시리아를 포함한 전략적 현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해 진전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라브로프 장관도 정상회담이 무산된 데 아쉬움을 표시하고 나서 러시아가 무역이나 핵 연구, 안보 등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할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고 소개했음.



-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도 중요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이나 한반도 핵 이슈를 비롯한 많은 주제를 조용하고 솔직하게 논의할 것"이라면서 "양국은 세계 곳곳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등 정세를 안정시키고 대량파괴무기(WMD)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음.

사. 중·일 관계

● <日, 중국 센카쿠 상륙 대비 독자 섬 탈환훈련>(8/8, 연합뉴스)

- 일본 자위대가 최정예 공수부대를 동원해 센카쿠(중국어명: 다오위다오) 충돌에 대비한 독자 섬 탈환훈련을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음.
- 대만 중국시보는 8일 일본 잡지 주간문춘 최신호를 인용, 자위대 소속 제1 공정단(공수부대)이 지난 6월 7일을 전후해 미야자키현 자위대 훈련장에서 공중 폭격 및 병력 수송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음.
- 이 훈련에는 120mm 박격포와 C-1 수송기 등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음. 인근 주민도 강한 포성이 잇따라 들렸고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음. 제1 공정단은 1천900명의 정예 공수대원을 보유한 자위대 최강 부대 중 하나임.
- 일본 매체는 이 훈련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센카쿠 상륙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음. 자위대 사정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미야자키현 훈련장이 선택된 것은 지형이 센카쿠와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 주간문춘은 일본이 최근 자국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수비 대책을 부쩍 강화하는 것은 센카쿠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중국 측의 동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분석
- 이 잡지는 미군 태평양사령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미군이 중국 군당국과 센카쿠 근해에 출현하는 중국 해양감시선의 무선교신 내용을 감청한 결과, 올해 봄부터 센카쿠 문제 대응 주도권이 중국 국무원에서 인민해방군으로 넘어가는 변화가 감지됐다고 전했다.
- 아울러 중국 당국이 해양경찰 기능을 한 데 모은 해경국을 신설하고, 센카쿠 대책을 담은 '센카쿠 관련 대(對)일본 행동지침'을 구체화하는 것도 일본을 자극하는 요인이라고 이 매체는 짚었음.
- 한편, 일본은 이미 지난 6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미군과 합동으로도 섬 탈환 군사훈련을 한 바 있음.

● <日 이즈모 進水 다음날... 中 해경선 4척 센카쿠 무력시위>(8/9, 동아일보)

- 중국은 8일 일본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어명: 다오위다오)에서 중국 해경선이 일본 우익 선박들을 몰아냈다고 밝혔음. 또 사상 처음으로 해당 해역에서 만 하루 이상을 체류하며 순찰 활동을 벌였다고 말했음.
- 이에 대해 일본은 중국 해경선이 일본 선박을 몰아냈는지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채 "힘을 배경으로 한 현 상황 반전(反轉) 시도"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음.



- 이는 중국이 해상 순시 전담기구를 설치한 데 이어 일본이 역대 최대 규모의 호위함 '이즈모'를 진수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므로 추가 충돌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음.
- 중국 국가해양국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해경선 2350, 1126, 2102, 2166호 편대가 7일 우리의 다오위다오 영해에서 주권수호를 위한 순찰을 했다"고 전했다.
- 해양국은 "해경선 편대는 주권을 침해한 일본 선박을 발견해 다오위다오 영유권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엄정하고 분명하게 설명한 후 해당 선박을 몰아냈다"고 밝혔다.
-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해경국의 집행 능력을 선전함과 동시에 전날(6일) 일본이 항공모함급 호위함 이즈모를 진수한 데 대한 무력시위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옴.
- 한편, 중국의 실력행사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음. 일본 외무성의 이하라 준이치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8일 한스창 주일 중국대사관 공사를 불러 중국 해경선의 센카쿠 영해 진입에 대해 항의했음.
- 기시다 후미오 외상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중국 공무선의 최장 시간 침범에 대해 일본은 극도로 유감을 느낀다"며 "힘을 배경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는 현 국제사회에서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아베 '정경분리'에 中-日 경제관계 호전될까>(8/9,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경분리' 태도를 보이면서 중국과 일본의 경제 관계가 호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9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아베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 등 4명이 최근 일본의 패전일인 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통보한 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제적 영향력 분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 전문가들은 대체로 아베 정권의 이런 입장 표명이 경제협력 문제를 정치적 사안과 분리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하고 있음.
- 중국 외교학원의 저우용성 교수는 아베 정권의 이런 태도에 대해 "과거 일본 정부가 중국에 대해 취했던 정경분리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음.
- 그는 이어 "아베가 바라는 것은 정치적 냉각기에도 경제협력이 뜨거웠던 과거의 상태를 되살리는 것"이라며 "정치관계가 소원하더라도 일본은 거대한 시장인 중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 아베 총리가 지난달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중일관계를 전략적 호혜관계의 원점으로 돌려놓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중국과 전제 조건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것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분석했음.
- 하지만 이런 일본의 태도가 양국의 경제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정치관계 개선과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



- 리가 우세했음.
- 중국과 일본이 과거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도 양호한 경제관계를 유지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의 양국 간 센카쿠(중국어명: 댜오위다오) 분쟁은 양측 모두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근본 이익'이 달려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것임.
 - 게다가 중국이 대외개방을 확대하면서 중국에서 일본 상품의 대체불가성도 크게 낮아져 정치적 변수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임.
 - 지난해 일본의 센카쿠 분쟁이 격화한 뒤 중국시장에서 일본산 자동차 판매량이 줄면서 독일계 자동차가 약진했으나 아직도 일본이 이를 역전시키기 못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힘.
 -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소의 진 연구원은 "국제 관례상 대국 간의 관계는 단순한 경제관계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경분리 불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경분리는 비정상적 현상이라서 오히려 경제관계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중국과 일본의 무역이 지난해 3.9% 줄어든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9.3%나 감소했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임.
 - 아울러 중국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가 국제사회에서 폭넓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다 아베의 정경분리 시도가 지속될 경우에는 일본이 거대한 중국시장을 잃게 되면서 경제 회복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아. 일·러 관계

- <일본·러시아, 19일 쿠릴 4개섬 영유권 협상 재개>(8/10, 연합뉴스)
 - 일본과 러시아의 쿠릴열도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 협상이 오는 19일 러시아에서 재개된다고 일본 언론들이 10일 보도했음.
 - 양국 정부는 모스크바에서 외무차관급 협의를 열어 지난 4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합의한 '쌍방이 수용가능한 영유권 해결책' 도출을 위한 협상에 착수함.
 - 이번 차관급 협의는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이 당시 정상회담에서 영유권 협상을 가속화하도록 각각의 외교부에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양국이 영유권 협상을 본격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임.
 - 일본과 러시아는 홋카이도 서북쪽의 쿠릴열도 가운데 에토로후, 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등 남부 4개 섬의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음.
 -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 조약을 근거로 쿠릴 4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 반면, 현재 4개 섬을 실효지배하고 있는 러시아는 쿠릴열도가 2차대전 종전 이후 전승국과 패전국 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음.



자. 기. 타

● <미국·중국·일본, 베트남에 '구애 공세'>(8/8, 연합뉴스)

-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일부도서를 둘러싼 분쟁 외중에서 전략적 가치가 치솟은 베트남에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음.
- 교도통신은 아베 신조 총리가 내년 3월 쓰영 편 상 베트남 국가주석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8일 전했다.
- 관측통들은 양국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영유권 분쟁 등의 국제정세를 고려, 전략적 동반자로서 상호 정치안보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망했음.
- 이들 관측통은 일본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對) 중국 포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 아래 상 주석을 초청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음.
- 이에 앞서 미국은 상 주석을 초청,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등 베트남과의 관계를 한층 공고히 했음. 양국은 정치안보협력 외에 올해 말까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마무리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협력 확대에 합의했음.
-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상 주석의 방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조만간 베트남을 방문하기로 하는 등 양국 관계가 급속 강화되고 있음.
- 관측통들은 당시 양국 정상회담이 의회 일각에서 베트남내 인권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이뤄진 데 주목하며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이 그만큼 절실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음.
- 반면에 스카보러 섬(중국어명: 황옌다오) 등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놓고 베트남, 필리핀과 대립하던 중국 역시 미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필리핀을 집중 견제하는 차원에서 베트남에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있음.

● <아베, 법제국장관에 '집단적자위권 긍정파' 기용>(8/9,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8일 각의에서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1년 12월 임명된 야마모토 쓰네키 내각법제국 장관을 퇴진시키고 고마쓰 이치로 주 프랑스 대사를 후임 장관으로 기용기로 결정했음.
- 정부의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법제국 장관은 법제국 차장이 승진 임명돼온 것이 관례임.
- 이번에 아베 정부가 이례적으로 외무성 인사를 법제국 장관으로 기용한 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받아들여짐.
-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킴.
- 일본 내각법제국은 그동안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전쟁 포기, 전력보유교전권 불인정 등을 명기한 헌법 9조 해석상 자위권 행사는 할 수 없다는 해석을 견지해 왔음.
- '집단적 자위권 긍정파'로 분류되는 고마쓰 씨는 아베 신조 총리가 제1차 아베 내각(2006~2007년)때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해 설치한



전문가 회의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 업무를 외무성 국제법 국장으로 관장했음.

- 도쿄신문에 따르면 고마쓰 씨는 2011년 10월 출간된 자신의 저서 '실천 국제법'에서 강도에게 살해될 것 같은 친구를 구하기 위해 강도를 공격하는 '타자를 위한 정당방위'를 집단적 자위권으로 비유하면서 이 같은 정당방위는 "법제도상으로 상식적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마타이 세이지 사민당 당수 대행은 이날 "아베 내각은 (교전금지·군대 비보유 등을 담은) 헌법 9조 개헌이 어렵기 때문에 (개헌 요건을 낮추는) 96조 개정을 먼저 하려고 하고, 96조를 바꾸기 전에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 해석도 바꿔 버리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